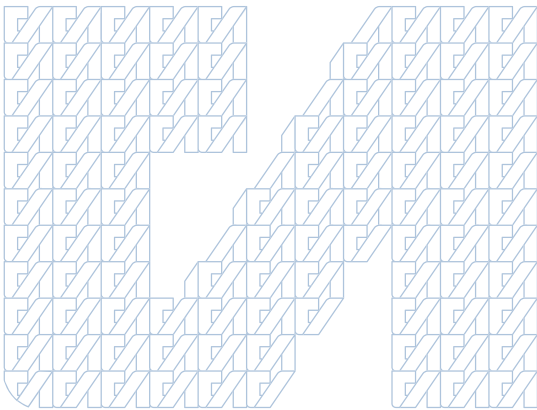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

유병선·이창림·김덕진



정책연구 2020-38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

유병선·이창림·김덕진

연구책임

• 유병선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창림 / 정책협력관
• 김덕진 / 충남대학교 정치학박사

정책연구 2020-38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

발행인 정 재 근

발행일 2020년 10월 30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갓피플 TEL 042-223-00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코로나19는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수반하여 과거와 다른 차원의 사회적 불확실성 확대시키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실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변화로는 강해지는 반세계화 흐름,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 확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증가,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생명공학 혁명 가속화, 원격 의료 본격 부상, 중앙정부 역할 확대, MICE 산업 변화 등이 고려(The Wall Street Journal, 2020)
- 민방위의 역할을 살펴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의미함
 - 지방정부는 국가적 재난사태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 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난 및 국민의 생활 안전까지 책임지는 포괄안보 개념에 따른 민방위 분야별 대응방안과 교육콘텐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시대변화에 따른 민방위 시설에 대한 무관심을 비롯하여 안보 불감증 해소를 위한 대피 및 급수시설에 대한 점검과 시민들이 이를 숙지하고 긴급 상황 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대응능력 제고가 필요함
 - 민방위대는 20~40세의 남성으로 조직되도록 되어 있으나, 여성도 지

원에 의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음.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하면, 여성 민방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장에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무와 역할 면에서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 역할 수행, 민방위 사태 시에는 대피 안내 유도, 현장수습·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분야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첫째, 대전광역시 민방위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 둘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재난 안전 연계 민방위 교육콘텐츠 적용방안 모색
 - 셋째, 효율적인 여성 민방위대 운영방안 검토
 - 넷째, 시민 친화적 대전광역시 민방위 시설 운용 방안 강구

■ 연구방법 및 내용

- 문헌연구
 - 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국가의 민방위 관련 연구문헌 검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분석 및 정리
- 코로나19 관련 현황 자료
 - 감염증의 특성 및 사회공동체의 영향에 관한 사항 정리
 - 코로나19에 관련한 국가차원 활동 분석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시대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예측
 - 국가안보 및 시민 안전에의 영향

- 법/제도적 분석
 - 「민방위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관련 조례 및 운영현황 검토
 - 민방위 기본법의 주요 내용
 - 통합방위법의 주요 내용
 - 여성 민방위대 관련 주요 지침 및 조례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의 주요 내용
 - 지원민방위대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 2020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

-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분석함
 - 문재인 정부의 안전 관련 국정과제
 - 대전광역시 안전정책

- 전문가 자문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관련 의견 수렴
 - 재난 안전 연계 민방위 교육 콘텐츠 개발
 - 여성 민방위대의 충원 필요성 및 역할 정립
 -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민방위 제도 운영방안
 - 민방위 교육 콘텐츠 생산의 변화 방향 및 발전 방안
 - 전통적 안보에서 재난대응 중심의 민방위대 역할 재정립

■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1. 민방위 교육 발전 방안

- 현행 민방위 제도에서는 아직 사이버 공간 관련 공식적인 민방위 활동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사이버 민방위 역시 국가안보와 재난에 대비한 일체의 비군사적 자위 활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과 해외 사이버 부대 운영 사례 고려
 -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민방위대 운영에 대한 인력, 교육, 훈련, 운영자금 모금 시스템 구축
 - 사이버 방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중요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반 조직 운영에의 반영이 필요함
 - 위기관리 업무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 상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는 조직을 설계하고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재정, 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이들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의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함

2. 민방위 경보 방송

- 민방위 경보 전달 방식은 옥외 경보 사이렌, 라디오를 통한 동시 음성 방송, TV와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통한 자막 형태의 경보 등이 활용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전광역시는 시민홍보 및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대전광역시, 2020b)
 - 언론매체, 홈페이지, SNS 활용, 휴대폰재난문자방송(CBS) 송출, 홍보 포스터 제작 배부를 통한 시민행동요령 예방수칙 안내
 - 일일상황 보고, '120 콜센터' 상담안내 서비스 실시

- 민방위 경보 방송에 대한 정보 수용자의 인식 조사 및 재난정보 입수 매체의 특성, 세대별 응답 결과 분석에 따른 편차가 존재
 - 민방위 사태 시(민방위 훈련 포함) 재난정보 안내문자와 같이 신속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민방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비상사태 시 대응해야 할 개인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는 국민의식 개선과 더불어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에 1차적인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2차적으로, 정보 수용자들이 문자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민방위(재난 포함) 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민방위 및 재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방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 접근 용이성이 구비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한편, 대전에서 개최한 AI 기반의 화재 대피로 안내 시스템을 민방위 운용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12월 9일, 한국기계연구원은 인공지능 기반 화재 대피로 안내 연구 성과 시연회를 도시철도 시청역에서 개최함
 - 이 시스템은 역 안에 설치된 시뮬레이션(IoT) 센서를 통해 연기농도·온도·일산화탄소 등을 바탕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대피로를 계산하여 화재발생지점부터 출구 아래 계단까지 기다란 녹색 선을 깜박거리게 하는 방식임(주재현, 2019)

- 아직은 시범운영 단계에 있는 시스템이지만 실증테스트와 검증을 거쳐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시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3. 민방위 대피시설

- 대전의 경우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다만 한국의 적용 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1인당 소요면적이 좁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민방위 대피시설의 효용성 부분과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고려와 민방위 사태의 유형에 맞는 대피시설 지정이 요구됨
 - 대피소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밀폐가 가능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완전한 밀폐가 불가능함. 이는 핵 공격에 대해 민간인을 보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피소 방호문, 방독면 등 제반 시설과 비품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됨

4. 민방위 급수시설

- 급수시설 시설이 음료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 수질관리 요구
 - 유성구 궁동성당 앞 급수시설의 경우 수질 오염으로 급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되어 있으나, 여전히 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시청에 학생 식수용 병물 25만 병을 대전시에 전달함(최정우, 2020)
 - 학교 내 급수대 등 공용물품 사용이 지양되고 있음
 -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재난재해 상황 시 긴급지원용으로 병물을 생산하므로 대전시는 유사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적 함의(종합정리)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행정) 질병관리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감염병 관리 및 확산 억제 정책
- (일상생활 변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상되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대응
- (지역경제) 국내외 이동제한, 고용 및 수출, 자영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경제적 충격 대한 대응
- (도시공간 제고) 원격근무 및 교육,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대비한 도시공간 구조와 형태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

○ 민방위 운용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재정립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적 역할에 비추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기준에 준하여 관내 상황을 평가하고 지역 설정에 맞는 맞춤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정책적 컨트롤 타워를 갖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주요 재난 및 위기 관리 사항을 수집하고 해당 위기관리 관련 정보를 중앙정부 및 언론 등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코로나19 등의 상황대응에서 보인 민방위 활용의 이원화를 검토하여 재난안전 및 민방위 부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 강화
- 사회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연대 및 정책운영 시 공동의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연구가 보다 진전될 필요성이 있음

○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시민친화적 환경 조성

- 국내외적 안보환경 및 사회재난안전을 고려한 민방위 교육콘텐츠의 모색
- 민방위 담당자의 활동 및 교육의 전문성 강화
- 지역 중심의 민방위 활동 제고를 위한 여건 성숙 관심 제고

- 향후 민방위 제도의 보완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연구 제안
 - 지역 민방위 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향후 정책연구를 제안함
 - 중앙과 지방정부 간 민방위 관련 권한 및 역할 등 제도적,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한 민방위 자율적 운영 제언
 -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한 유지와 보수, 시민친화적 활용 방안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공론장 운영 방안
 - 여성의 민방위 대원 참여제고 방안 및 고유임무 가능여부에 관한 법률적 및 사회적 방안 제고 등

차 례

| | |
|--------------------------------------|----|
| 1장 서론 | 3 |
|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1. 연구의 필요성 | 3 |
| 2. 연구목적 | 5 |
|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6 |
| 1. 연구내용 | 6 |
| 2. 연구방법 | 7 |
| 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 8 |
| | |
| 2장 민방위 제도 및 정책추진 현황 | 13 |
| 1절. 민방위 제도 관련 주요 법령 | 13 |
| 1. 민방위 기본법의 주요 내용 | 13 |
| 2. 통합방위법의 주요 내용 | 17 |
| 3. 여성 민방위대 관련 업무지침 및 조례 | 18 |
| 4.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의 주요 내용 | 19 |
| 5. 경기도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 20 |
| 6. 2020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 | 20 |
| 7. 시사점 | 22 |
| 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할 | 22 |
| 1.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역할 | 22 |
| 2.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할 | 24 |
| 3절. 안전 관련 정책 | 25 |
| 1. 문재인 정부의 안전 관련 국정과제 | 25 |
| 2. 대전광역시 안전정책 | 26 |

| | |
|------------------------------------|----|
| 3장 코로나19 위기와 민방위 | 31 |
| 1절. 코로나19로 인한 시대변화 | 31 |
| 1. 시대변화 예측 | 31 |
| 2. 코로나19와 국가안보 | 32 |
| 2절. 안보개념의 변화 | 33 |
| 1. 안보환경의 변화 | 33 |
| 2. 인간안보 | 35 |
| 3. 사이버 안보 | 41 |
| | |
| 4장 전문가 심층면접 | 49 |
| 1절. 조사 설계 | 49 |
| 1. 조사 대상 | 49 |
| 2. 조사 내용 | 50 |
| 3. 조사 방법 및 구조화 | 50 |
| 2절. 전문가 인터뷰 내용 | 51 |
| 1. FGI 개요 | 51 |
| 2. FGI 주요내용 | 52 |
| 3절. 조사 결과(정리) | 65 |
| | |
| 5장 민방위 제도 발전방안 | 73 |
| 1절. 민방위 교육 발전방안 | 73 |
| 1. 민방위 교육 현황 | 73 |
| 2. 사이버 민방위 제도 확대 | 74 |
| 3.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방안 | 76 |
| 2절. 민방위 경보 방송 | 77 |
| 1. 민방위 경보 방송에 대한 정보 수용자 인식 | 77 |
| 2. 재난정보 입수 매체 | 77 |
| 3. 민방위 경보시스템 개선 방향 | 79 |
| 3절. 민방위 대피시설 | 80 |
| 1. 현황 | 80 |

| | |
|-----------------------------------|----|
| 2. 평가 | 81 |
| 4절. 민방위 급수시설 | 82 |
| 1. 현황 | 82 |
| 2. 평가 | 83 |
| | |
| 6장 결 론 | 87 |
| 1절. 연구결과 | 87 |
| 1. 민방위 및 운용 개념의 변화 | 87 |
| 2.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시민친화적 환경 조성 | 88 |
| 2절. 정책 제언 | 89 |
|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89 |
| 2. 민방위 지역활동 강화 | 90 |
| 3. 시민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역할 모색 | 90 |
| | |
| 참고문헌 | 93 |
| | |
| 〈부록 1〉 FGI 질문지 | 97 |

표 차례

| | |
|------------------------------------|----|
| [표 2-1] 민방위 주요 활동 | 14 |
| [표 2-2] 민방위대의 임무 | 14 |
| [표 2-3] 주요 국가의 민방위대 편성 비교 | 15 |
| [표 2-4] 민방위 교육 훈련 제도 | 15 |
| [표 2-5] 민방위 교육내용 | 16 |
| [표 2-6] 여성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 및 역할 | 18 |
| [표 2-7] 지역 특성에 따른 특성화 훈련(안) | 21 |
| [표 3-1] 월경성 감염병 비교 | 38 |
| [표 4-1] FGI 조사대상자(전문가) | 51 |
| [표 4-2] 일반인 인터뷰 | 51 |
| [표 5-1] 사이버 민방위대의 임무(안) | 74 |
| [표 5-2] 국가별 대피시설 1인당 소요면적 기준 | 82 |

그림 차례

| | |
|---|----|
| [그림 3-1] 신홍안보로서 코로나19의 창발 | 35 |
| [그림 3-2] 신홍안보로서 데이터 안보의 창발(김상배, 2018) | 43 |

서론

-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1장

1장 서론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수반하여 과거와 다른 차원의 사회적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음. 이러한 위험 상황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전통적인 안보위협에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외국에서 자국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총알, 포탄,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으로 간주해 옴. 이에 대비한 국가 능력은 전쟁 방어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 더해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확장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변화로는 강해지는 반세계화 흐름, 제로 금리·거대 부채 시대 도래,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 확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증가,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생명공학 혁명 가속화, 원격 의료 본격 부상, 중앙정부 역할 확대, MICE 산업 변화, 대규모 관중이 모이는 공연·예술·스포츠의 변화, 여행·음식문화 변화 등이 고려됨(The Wall Street Journal, 2020)
- 민방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의미함

- 지방정부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 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하여야 함
-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난 및 국민의 생활 안전까지 책임지는 포괄안보 개념에 따른 민방위 분야별 대응방안과 교육콘텐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시대변화에 따른 민방위 시설에 대한 무관심을 비롯하여 안보 불감증 해소를 위한 대피 및 급수시설에 대한 점검과 시민들이 이를 숙지하고 긴급 상황 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대응능력 제고가 필요함
- 민방위대는 20~40세의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되어있으나, 여성도 지원에 의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음.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하면, 여성 민방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장에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운영하게 되어 있음
 - 임무와 역할 면에서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 지역 예찰 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 역할 수행
 - 민방위 사태 시에는 대피 안내 유도, 현장수습·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분야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첫째, 대전광역시 민방위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 둘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재난 안전 연계 민방위 교육콘텐츠 적용방안 모색
 - 셋째, 효율적인 여성 민방위대 운영방안 검토
 - 넷째, 시민 친화적(시민 숙지형) 대전광역시 민방위 시설 운용 방안 강구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민방위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우선 민방위 제도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분석함
 - 민방위 기본법의 주요 내용
 - 통합방위법의 주요 내용
 - 여성 민방위대 관련 주요 지침 및 조례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의 주요 내용
 - 지원민방위대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 2020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할 분석
-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분석함
 - 문재인 정부의 안전 관련 국정과제
 - 대전광역시 안전정책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시대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예측
 - 국가안보 및 시민 안전에의 영향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민방위 제도 운영방안
 - 민방위 교육 콘텐츠 관련
 - 전통적 안보에서 재난대응 중심의 민방위대 역할 재정립
- 여성 민방위 대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민방위 시설의 현황 분석 및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시민친화적 민방위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 대전광역시외의 경우 745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과 195개소의 급수시설을 운영중으로 대피와 급수의 기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가능한 한 시민 여가 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 모색

2. 연구방법

- 법/제도적 분석
 - 「민방위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관련 조례 및 운영현황 검토
- 코로나19 관련 현황 자료
 - 감염증의 특성 및 사회공동체의 영향에 관한 사항 정리
 - 코로나19에 관련한 국가차원 활동 분석
- 문헌연구
 - 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국가의 민방위 관련 연구문헌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관련 의견 수렴
 - 재난 안전 연계 민방위 교육 콘텐츠 개발, 여성 민방위대의 필요성,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 양기근(2008)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진 방안: 경상남도 여성 민방위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2008년 처음으로 여성 민방위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례를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분석하고, 여성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보장, 사회봉사 기회 부여 확대 등의 활성화 정책을 제안함
 - 사회적으로 성별 분업을 중시하는 여성 참여 제도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안보 영역에서도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 봉사활동 참여 기회 부여와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네트워크·호혜성의 규범·신뢰 등의 구성요소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소속감·정체성·결속력 등을 제공해주는 효율적 장치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자본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남성에 비해 지역에 머무는 시간과 지역문제에 대한 정보교환을 더 많이 하는 여성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음(유현숙,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이 민방위사태 발생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1차적인 응급 대응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여성 민방위대 구성의 필요성, 구성할 경우 훈련 방법,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역할 중에서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 재난안전과(2008)에 의하면 여성민방위대의 문제점으로 첫째, 민방위 및 재난 안전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둘째, 재난이 없는 시기 기동대 활동 방안 미흡, 셋째,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족 등이 지적됨(경상남도 재난안전과, 2008: 양기근, 2008 재인용)

○ 안철현(2009)은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민방위/비상대비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서 국가 위기관리의 주체 조직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 위기의 관리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함

- (1) 관내 재난 예방 및 대비 차원의 활동 강화
- (2) 여성의 민방위대 지원과 활동을 독려·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3) 민방위와 위기관리 거버넌스 단위 간 평시 위기관리의 연계성 강화

○ 곽천섭 외(2015)는 “민방위 경보 방송에 대한 정보 수용자 인식 연구”에서 시민들의 대응행동은 경보 방송의 지시에 따를 것으로 언급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이렌 중심의 경보체계에서 이용률이 높은 TV와 뉴미디어 매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김경진(2015)은 “사이버 민방위 제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함의”에서 미국과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민방위 제도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이버 민방위대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함

○ 남택진(2015)은 「포괄안보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 국가위기관리체계 연구」에서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영국 등의 국가 위기·안전관리체계를 설명하고, 그 시사점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

○ 제임스 김 외(2018)는 “한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인을 수용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체류조차도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

- 이에 적절한 방호능력을 갖춘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함

- 본 연구는 기존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할 것이며, 대전광역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민방위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됨

민방위 제도 및 정책추진 현황

1절. 민방위 제도 관련 주요 법령

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할

3절. 안전 관련 정책

2장

2장 민방위 제도 및 정책추진 현황

1절. 민방위 제도 관련 주요 법령

1. 민방위 기본법의 주요 내용

- 민방위 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조)
- 민방위 상황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자위적 활동을 의미하며, 세부 상황은 다음과 같음(제2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통합방위사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여 선포하는 갑, 을, 병종으로 구분되는 사태¹⁾
 - 재난사태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할 의무를 가짐(제3조)
 - 민방위대의 주요 활동과 임무는 다음과 같음

1) 이에 대해서는 통합방위법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임

[표 2-1] 민방위 주요 활동

| 구분 | 내용 |
|----------|--|
| 주민 자위 활동 |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목표 |
| 인도적 활동 | · 전쟁,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구체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 비군사적 활동 |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장비와 기구 사용 |

※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afekorea.go.kr>) 참고 재구성

[표 2-2] 민방위대의 임무

| 평상시: 재난 대비 | 유사시: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 대비 예비활동 · 비상급수시설, 대피소, 통제소 설치 관리 ·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전파, 주민 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 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 침공 시 군사작전 물자운반, 노력 지원 · 민심안전 및 승전의식 고취 등 |

※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afekorea.go.kr>) 참고 재구성

○ 민방위 준비(제15조) :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함

-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준비
-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 및 정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으로 조직함(제18조)

-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음(제18조 2항)
- 참고로 주요 국가의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3] 주요 국가의 민방위대 편성 비교

| 한국 | 스웨덴 | 영국 | 덴마크 | 미국 |
|------------------------|-----------|-----------|--------------------|------------------------|
| 20~40세 남성 | 16~70세 남녀 | 지원제 | 16~65세 남녀 | 지원제(유급) |
| 이스라엘 | 싱가폴 | 스위스 | 독일 | 대만 |
| 16~62세 남성 17~50세 여성 | 지원제 | 25~50세 남성 | 지원제 (18~65세 남성) | 16~65세 남성 16~35세 여성 |

※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afekorea.go.kr>) 참고 재구성

-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국가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제23조의 1항)

[표 2-4] 민방위 교육 훈련 제도

| 주요 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 편성 연령: 20~40세 · 민방위 교육시간: 연 4시간(편성 1~4년차 대원) · 비상소집훈련: 편성 5년차 이상 · 민방위날 민방위훈련 실시: 매월 15일 · 민방위경보: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

※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afekorea.go.kr>)

- 민방위 교육 훈련 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 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세부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2-5] 민방위 교육내용

| | |
|----|--|
| 내용 | 집합교육(강의, 실습), 비상소집교육 |
| 대상 | 통리대원, 기술지원대, 직장대 |
| 방법 |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통신·서면교육, 야간·주말교육, 실용민방위교육 |

※ 출처: 행정안전부(2020)

- 사이버 교육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 행동 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 스마트 민방위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이트 주소: <http://www.cdec.kr/>
 - 스마트 민방위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 중 택1
 - PC 및 스마트 웹 시청 가능, 기간 내 24시간 시청 가능

- 한편, 헌혈 참여 민방위대원의 교육시간 인정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해 교육시간 인정
 - 2020년도 헌혈 참여만 인정
 - 헌혈증(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됨

2. 통합방위법의 주요 내용

-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조)
-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함(제2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가 국가방위요소에 포함됨(2항)
-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로 갑, 을, 병종사태로 구분됨(제2조 내용)
 - 갑종사태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 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해야 할 사태를 말함
 -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사건을 수행해야 할 사태를 말함
 - 병종사태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했을 경우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함

3. 여성 민방위대 관련 업무지침 및 조례

1) 행정안전부 업무지침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하면 여성 민방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장에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운영하게 되어 있음
- 여성 민방위대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2-6] 여성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 및 역할

| 구분 | 주요 임무 및 역할 |
|---------|---|
| 평시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요원 참여,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 강사,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
| 민방위 사태시 | 군사작전 필요물자 운반 노력 지원,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비상급수 관리 지원, 사후관리 복구 지원, 재난해제 복귀지원 및 재난 피해자 지원 |

※ 출처: 행정안전부(2019) 민방위 업무 지침

2) 부산광역시 복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가정의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응능력 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봉사대의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활동 범위는 재난예방·홍보활동, 인명구조(보조)활동, 의료구호(보조)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제2조)

- 구성은 주민 중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지 원자로 구성함(3조)
- 구청장은 연초에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교육훈 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제7조)

3) 경상남도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 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 사시 현장수습·복구에 초기대응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구성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주부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함(제4조)
 - 협동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부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신망이 두터운 주부
 -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부
-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 사태(재난활동 포함)로 구분하여 수행함
 - 평시: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 활동, 민 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 역할 수행
 -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역할 수행

4.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의 주요 내용

- 통합방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조)

- 협의회는 민방위대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을 심의함(제2조)

5. 경기도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 용인시는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 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제1조)
- 지원민방위대는 용인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함(제4조)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 봉사 정신이 강하고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음(제9조)

6. 2020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

1) 2019 훈련 분석(문제점/대책)

- 민방위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 등 참여의식 부족이 계속 지적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매체(SNS, 전광판, 인터넷·모바일 매체 등)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민방위대원의 훈련 참여 내실화 방안
 - 사태별 대처 요령을 숙달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및 임무 수행 훈련 강화

- 훈련 분야: 재난 대피 훈련, 민방위 대피 훈련
- 훈련 종목 선택 자체 훈련계획 수립(대전광역시 관련 발취)

[표 2-7] 지역 특성에 따른 특성화 훈련(안)

| 종목 | 특성화 훈련 내용 | 지역 |
|--------|--|---------|
| 테러 | · 폭탄·사이버테러 등 유형에 따른 행동 요령 숙달 · 화생방분대 등 관련 민방위대 운용 | 대도시 지역 |
| 방사능 누출 | · 방사능 안전 점검 및 누출 사고 대처요령 숙달 · 대피장소·시설점검 및 대피 유도훈련 | 원전 주변지역 |

※ 이 외에도 포격, 유해화학물질, 대형산불, 태풍·해일 등의 종목이 제시됨

2) 민방위 기술지원대

- 드론·로봇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자를 포함한 기술지원대 편성
- 정보통신·EMP(전자기파) 재난 및 드론 테러 등으로 피해 발생 시 기술지원대 활용 응급복구 및 현장수습지원

3) 민방위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

- 교육일정, 훈련 등 민방위 관련 내용을 미끼로 스팸(스미싱)이 전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다양한 홍보방안 및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매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대원을 대상으로 소속·임무 등 전달 시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시 스팸문자 피해 홍보 실시
- 홈페이지, SNS 등 지자체 보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7. 시사점

- 상기 요약한 법령 및 조례에서는 민방위 상황과 통합방위사태에 대한 정의의 전제를 적의 침투 또는 도발위협에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위협도 역시 민방위 상황 및 통합방위사태에 준하여 고려되어야 함
 - 적이 살포한 세균과 같은 화학전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현 시대 상황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자체는 스팸문자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안내서비스 사용을 금지하지만, 대원 본인 희망 시 문자안내 방법 및 피해 우려 등 인지 후 실시 가능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언택트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지자체에게도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할²⁾

1.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역할

- 중앙정부는 해당 위기 유형에 대한 범정부적 의사결정 및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하여 정부 차원의 관리 및 대처 방향, 방침 및 기조 등을 수립함으로써 위기관리에 관한 상위·최종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함
- 해당 유형의 위기관리 주관기관은 동 위기 유형의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유관기관 및 지방정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함

2) 이 부분은 안철현(2009)의 글을 요약한 것임

-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위기 유형의 위기관리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배분, 지원하는 국가 보유 위기관리 자원의 최종 관리 역할을 수행함

-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유형의 위기관리에 필요한 법령 및 매뉴얼을 제정·시행하는 운영자 역할을 수행함

- 해당 위기 유형에 대한 위기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내용을 식별하고 관련 정책·제도·방침 등을 수립 및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위기관리 활동의 기준자 역할을 수행함

2.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할

1) 중앙정부 방침에 따른 역할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내린 의사결정 내용을 관내 상황에 실제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러한 적용은 국가 위기관리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짐
- 지방정부는 해당 위기 유형의 위기관리 주관기관에 대해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함
- 중앙정부에 의해 배분된 위기관리 자원 및 자체 보유한 자원을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배분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중앙정부가 제정·시행한 법령 등 위기관리 문서를 직접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2)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역할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기준을 관내 상황에 맞게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치를 강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전쟁 등 군사적 위기를 제외한 재난이 관내에서 발생할 경우, 최초 위기 발생 시점부터 수습 또는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주요 재난 및 위기에 관한 관내 현장 정보와 상황을 수집하여 해당 위기관리 관련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국민, 언론 등에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역할을 수행함

3절. 안전 관련 정책

1. 문재인 정부의 안전 관련 국정과제

- 정책기획위원회는 지속가능 분야 국정과제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설정하고 ‘2대 전략 14개 과제’를 제시함(정책기획위원회, 2019)

- 전략 1: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통합적 재난관리체제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제 구축
 - 해안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전략 2: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2. 대전광역시 안전정책

1) 2019년 대전광역시 안전정책의 주요 성과³⁾

-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은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대응체계 구축 및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등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일류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집행함
-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 원자력 안전 확보 정책, 안전의식 제고 정책 등을 집행함
- 재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도시 체계구축을 위해 24시간 재난 감시, 재난대응인프라 확충, 지역안보태세 확립 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
 - (24시간 재난감시) 지능형 예·경보체계 구축(171개소), 재난안전상황실·민방위경보통제소·119종합상황실 합동감시, 재난상황 신속 전파(재난문자 발송 49건)
 - (재난대응인프라 확충) 안전대진단을 통한 총체적 점검(2,356개소), 내진확보(654개소), 폭염저감시설 확충(쿨링포그 10개소, 쉼터 937개소), 대응훈련(63회)
 - (지역안보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4회),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5월), 민방위 대피시설(742개소) 및 급수시설(187개) 점검·정비, 경보시설 확충(19개소)

3) 대전광역시 확대간부회의 자료(2019. 12. 4.)

2) 2020년 대전광역시 안전정책 방향⁴⁾

-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의 2020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현장 중심의 기동성·대응성 높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심 환경 조성
 - 사망자 수 감축 목표제 운영 등 안전지수 향상, 전략사업 발굴·투자와 안전실천문화 정착, 지역안보역량 강화로 안전일류도시 대전 구현 등임

-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종합적 안전대책 수립, 지역안전지수 향상,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의 사업을 전개함
 - 종합적 안전대책 수립: 재난유형별 실행력 있는 대응·복구·협업체계 마련
 - 지역안전지수 향상: 취약요인 분석·진단을 통한 전략사업 발굴·투자, 특히 분야별(교통·화재·자살·감염병·범죄·생활안전) 추진상황을 TF팀 운영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및 체계적 관리
 -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 확립: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분기별)

- 시민맞춤형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능형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마련, 내진성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지능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GIS기반의 지능형 예·경보시스템 구축(2018-2019), eSOP(재난대응표준운용절차)기반의 재난대응시스템 구축(2020), 빅데이터 IoT기반의 재난분야별 분석시스템 구현(2020-2022)을 단계별로 추진 중임

4) 대전광역시 확대간부회의 자료(2020. 1. 6.)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교육·신고 활성화, 시민주도형 안전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안전교육·신고 활성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확대, 안전신고 포상제, 안전체험 한마당 등
 - 시민주도형 안전문화 확산: 안전위험요소를 주민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안심마을사업 추진, 민·관 협업 안전타운 워킹 활동, 안전캠페인 등

코로나19 위기와 민방위

1절. 코로나19로 인한 시대변화

2절. 안보개념의 변화

3장

3장 코로나19 위기와 민방위

1절. 코로나19로 인한 시대변화

1. 시대변화 예측(이왕기 외, 2020)

- 미래 변화 예측에 대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음
- 사회적 변화: 대면사회에서 비대면(언택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 (비대면 사회 확산) 재택근무와 온라인학습이 확산되고 홈루텐스(집에서 노는 인간), 랜선문화가 일반화되어 언택트 소비 확산, 대중문화 감소와 개인문화 확대
 - (가치관과 인식 변화) 자발적 고립 생활이 일반화되어 가족 중심 가치가 확산되고, 공익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자발적 재난공동체의 형성, 웰니스(wellness)와 탈도시화 경향 확대
 - (디바이드 심화) 기존 불평등 구조 심화와 계급 및 세대 간 갈등 발생, 인종과 종교 차이로 인한 차별 증가, 특히 언택트 사회와 디지털 사회에서의 디바이드 현상 심화
- 기술적 변화: 생명과학 기술 혁명과 디지털 사회 가속화
 - (생명과학 기술 혁명) 공격적인 과학기술 R&D에 기초한 전문인력 양성 과 기술 확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지속적인 퇴치 노력 가속화
 - (디지털 사회 가속화) 홈오피스, 스마트오피스, 에듀테크 등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급성장
- 경제적 변화: 경제적 충격 여파와 산업구조 재편
 - (경제적 충격 여파) '대대공황'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여파의 지속, 전

세계적인 실업대란 발생과 확산, 국가의 초대형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책 추진

- (산업구조 재편) 세계화 방향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제조업 리쇼어링 부상, 공유경제 하락과 비대면사업 및 홈이코노미 확산, 재택근무 등 노동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가속화

○ 환경적 변화: 지구의 재발견과 감염병 사회의 지속

- (지구의 재발견) 전 세계적인 경제활동 일시 중단으로 깨끗해진 지구 발견, 지구온난화 대비 등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 확대
- (감염병 사회 지속) 신종 바이러스 위협의 지속, 생존을 위한 위생 및 안전의식 확산, 의료폐기물과 일회용품 사용 증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시민참여형 방역 확대 증가

○ 정치적 변화: 세계화 방향 전환과 빅브라더 출현

- (세계화 방향 전환) 자국 우선주의, 자원 민족주의, 장벽 도시, 식량주권 등의 등장으로 G제로(G0)시대, 분절된 세계, 국제기구의 영향력 감소 예상,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연대 노력 등장 예고
- (세계 패권경쟁) 팬데믹 이후 미중 갈등 심화, 유럽 통합체제 약화, 국제리더십의 새로운 기준 등장 전망
- (빅브라더 출현) 위기관리와 극복을 위한 정부의 통제 및 감시 권한 강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스마트정부 및 재정정책의 중요성 증가로 인한 정부 권력의 강화

2. 코로나19와 국가안보

○ 코로나19 위기는 각 국가의 군사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국방전력 유지를 힘들게 하고 있음

- 2020년 5월 현재, 미국은 시어도어 루즈벨트호(CVN-71), 칼빈스호(CVN-70),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니미츠호(CVN-68) 등 함공

- 모함 4척을 포함한 20척 이상의 함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함
- 프랑스의 핵 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러시아와 네덜란드 잠수함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함

- 한국군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함
 -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예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 특히 군은 민간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의 금지를 통해 예방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시행함
- 군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중대한 안보위협의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정병두 국방장관은 2020년 6월 15일 국방학술세미나에서 ‘비전통 안보위협 대비 국방대응체계 구현’을 국방개혁에 추가하겠다고 밝힘(임채무, 2020)
 - 이를 위해 관련 법령체계와 대응 매뉴얼의 점검과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부대 편성과 시뮬레이터 장비 등을 이용한 가상훈련 활성화와 같은 군 구조 개편이 요구됨(형혁규, 2020)

2절. 안보개념의 변화

1. 안보환경의 변화

-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은 단순한 질병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감염으로 확대되어 전 지구인에게 정치, 사

회,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음

○ 안보 환경의 변화

- 1991년 소련 붕괴로 냉전 질서에서 탈냉전 질서로 변화
- 2001년 9.11 테러 발생으로 근대 질서에서 탈근대 질서로 변화
- 2020년 코로나 사태는 ‘인간중심질서’에서 ‘탈인간(post-human) 질서’로 변화가 진행되는 중(김상배, 2020)
- 나아가 생태 패러다임이라는 ‘문명사적 변환’도 야기 가능
- 환경, 보건, 에너지, 식량 문제의 중요성에 더해 환경 보건 이슈가 안보 연구의 내재적 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됨(치명적 안보 위협으로 체감)

○ 21세기 들어 인수공통 바이러스 전염병 창궐이라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조류독감, SARS, 그리고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일련의 팬데믹은 우연이나 비위생성에 따른 것이 아닌 21세기 급속한 중국경제의 부상과 이에 따른 도시화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차태서, 2020)
- 2019년 대규모 호주산불, 2020년 시베리아의 고온현상 등 기후변화 역시 팬데믹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

○ 김상배(2020)는 코로나19 이후 신홍안보의 변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아래의 <그림>을 통해 다루고 있음

[그림 3-1] 신형안보로서 코로나19의 창발

미시적 안전 ⇒

- 바이러스와 인간의 공진화
- 지구화와 사람의 이동 네트워크
-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양질전환 인계점) ⇒

- 과학기술 격차와 개인정보 침해
- 무역/산업/금융 시스템의 교란
- 에너지/식량/기후변화의 연계

(이슈연계 임계점) ⇒

- 패권경쟁과 권력구조의 변화
- 체제경쟁과 거버넌스의 위기
- 담론경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지정학적 임계점) ⇒ 거시적 안보

※ 출처: 김상배(2020)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인간안보

1) UNDP 보고서의 인간안보 논의(도종윤, 2020)

- 2019년 말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문제는 단순한 질병의 확산을 넘어 글로벌 감염으로 확대되어 전 지구인에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

- 월경성 감염병 문제는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보건·위생 안보-에서 다루고 있음⁵⁾
- 비전통 안보는 국가 수준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주요 영역으로 봄. 따라서 비군사적 안보를 다루게 되는데 이를테면 기후변화, 자원고갈, 전염성 질병, 불법 이민, 식량부족, 인신매매, 마약밀매, 자연재해, 월경성 범죄 등이 포함됨

○ 비전통 안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시작이 어디에서 되었든 그로부터 파생되는 위협이 초국가적임
- 전통안보의 영역과는 달리 정치적 도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도전으로 인식됨
- 문제화된 이슈를 개별 국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지역협력 또는 다자협력을 필요로 함
- 안보의 보존 범위가 주권이 미치는 단일한 영토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생존, 행복, 존엄성 등 여러 측면에 걸쳐 있음(Caballero-Anthony, 2016)

○ 감염병의 문제는 보건안보 영역에 속하며 인간안보 차원에서도 논의됨. 1994년 UNDP 보고서(UNDP, 1994)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언급하면서 21세기 사회의 변화를 예측함

○ UNDP 보고서에서 다룬 인간안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국가의 빈부와는 상관없이 보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됨
- 인간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은 상호의존적이어서 지구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기근, 질병, 공해, 마약 거래, 테러리즘, 종족 분쟁, 사회적 갈등 등을 포함함

5) 전통안보는 현실주의(Realism) 시각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진 국가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힘(군사력)을 주로 사용하여 자구책을 찾는다는 것을 골자로 함

- 인간안보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인간안보는 사람 중심으로 취급되어야 함. 즉 사람이 사회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시장 혹은 사회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활기찬 생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음
- 인간안보는 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 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적 안보 등을 포함함
- 이 당시의 보건안보와 관련한 내용은 주로 저개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된 환경에 의한 감염 혹은 기생충에 의한 사망을 우려하는 것이었음
- 반면 선진국의 경우 위생시설의 미비에 기인한 보건보다는 고칼로리 식생활 혹은 생활 방식의 변이에서 오는 질병(AIDS, 암 등)과 죽음에 관한 것이었음
 - 또한 저개발국의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 그리고 외곽지역에 살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HIV/AIDS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감염성 질병이 지구 곳곳에서 창궐하면서 보건안보는 빈부의 차이나 열악한 환경의 차원에서는 다룰 수 없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음

2) 보건안보

- 보건안보 문제 중 감염병 문제는 외국과의 교류 차단, 통상 제한 등 경제적 단절을 가져오고 사회적 고립감, 가족과의 이별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킴. 또한 비상 조치에 기댄 정치적 독재의 출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인종차별), 개인정보의 유출, 투명한 정보의 공개 여부 등 정치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킴

○ 21세기 이후 월경성 감염병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감염성 질병이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또는 곰팡이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며, 사람 대 사람으로 직간접적으로 전파되고, 또한 동물매개 감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옮겨졌을 때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감염성 질병”을 일컫음
-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21세기 들어 2~5년 간격으로 월경성 감염병이 창궐함

[표 3-1] 월경성 감염병 비교

| 구분 |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SARS) | 신종플루 | 에볼라 바이러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감염국 수 | 32 | 129 | 4 | 24 |
| 창궐시기 | 2002-2003 | 2009 | 2014-15 | 2012-15 |
| 확진자 수 | 8,273 | 14,378 | 4,032 | 471 |
| 사망자 수 | 775 | 14,378 | 4,032 | 471 |
| 치사율 | 9.3 | 0.056 | 48 | 40.8 |

※ 출처: 세계보건기구: 이상환(2020) 재인용

○ 보건안보의 접근방식은 예방과 대비가 기본임(조한승, 2020)

- 백신을 개발하여 예방 접종,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세균의 번식과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그러나 최근 창궐한 신종 코로나19는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건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코로나19 외에도 보건안보를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들이 존재함

- 바이오 테러리즘의 위협: 생화학무기, 탄저균(2001 테러)
- 첨단 생명과학의 부작용 위협: 유전자 조작, 생명복제 사고, 항생제 내성 병원균

- 식약품 안전성 문제: 광우병, 유전자 조작 농산품, 식품제조공정의 오염, 가짜 의약품 유통

○ 각 국가는 위험요인에 대해 심각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상이함

- 미국, 영국 등은 바이오 테러리즘을 심각하게 인식함
- 한국, 일본, 호주 등은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관심을 가짐

○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지도자의 교체에 따라 변화함

- 예를 들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보건을 안보의 중요 요소로 간주하여 조류독감과 에볼라 등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보건안보팀을 백악관에 설치하고 해당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질병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침. 2014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을 주도하여 감염병과 바이오 테러에 대한 글로벌 테러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을 강조함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이민자 유입 억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수립한 세계보건안보팀을 예산 절감을 이유로 해체함. 그 과정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의 첨병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었고, 중국에서 활동하던 CDC 직원도 40명에서 10명으로 감축됨. 오바마 행정부가 계획했던 하루 150만 개의 방역 마스크 생산 시설 확충 계획도 취소됨

3) 국제 보건 협력

○ 보건안보를 위해 국제사회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해 옴

- 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 각국 보건당국, 보건의료 NGO, GAVI(세계백신면역연합)과 같은 민관파트너십(PPP), 미국 PEPFAR(에이즈퇴치를 위한 대통령 긴급대책)과 같은 보건 이니셔티브, 게이츠재단과 같은 자선재단, 보건의학연구기관, 제약회사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음

- 2000년 유엔의 MDG(밀레니엄개발목표) 이후 UNDP와 각국 ODA 기관과 같은 국제개발협력 행위자들도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됨
 - 신약개발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의료장비 기술거래에 관한 규제가 이슈가 되면서 WTO 등 무역 관련 행위자들도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됨
- 한국은 방역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020년 5월 12일 캐나다, 덴마크, 시에라리온, 카타르 등과 더불어 “글로벌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GFSGHS: 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Global Health Security) 출범 후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 자국의 위상 제고 노력으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함. 특히 국제 보건 개발협력 사업이 각국 ODA에 큰 부분을 차지해 공여국들은 저개발국에 대한 보건원조를 통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기 정책을 개발함(중국, 영국 등)
- 최근 보건안보를 위해 첨단기술이 활용되어 큰 효과를 보고 있으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 방역에서 한국이 보여준 스마트폰 위치추적을 활용한 감염자 동선 파악과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은 이러한 기술을 보건안보에 적용한 작은 사례임
 -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보건안보, 질병감지 네트워크 사용 중
 - 그러나 사생활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적 문제, 의도적인 정보 왜곡 행위의 방지와 같은 문제도 향후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과제임
 -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정보의 통제가 심한 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정보를 사적 이익 추구나 테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 결국 현 상황에서는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의 대안 제시 역할이 필요함

- 방역장비 공동 비축, 백신/약품 스와프, 감염병 핫라인, 표준적 공동대응절차 마련, 상호 검진인증제 도입, 출입국 조치 공동 매뉴얼 개발 등

3. 사이버 안보

1) 사이버 안보의 등장과 현황

-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류가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안보적 측면에서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임종인, 2020)
 - 개인적 삶과 사회적 활동의 많은 영역들이 사이버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이를 겨냥한 범죄와 테러, 스파이 활동도 사이버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확장된 온라인 활동과 트래픽 양은 사이버 범죄자들과 사이버 스파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는 사이버 공격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최선의 조건을 제 공함
 -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들의 글로벌 양극화 현상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을 (북한처럼)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범죄 활동에 나서도록 만들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북한 등 22개국을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이버 해킹이나 금융 질서 교란에 대처해야 한다고 발표함
 -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악용하는 사이버 공격들이 등장하고 있음
 -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줌(Zoom)과 같은 원격회의 소프트웨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기업 및 국가기밀을 노출시켰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한 스미싱과 가짜뉴스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3월, 체코의 대학병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병원 전체가

마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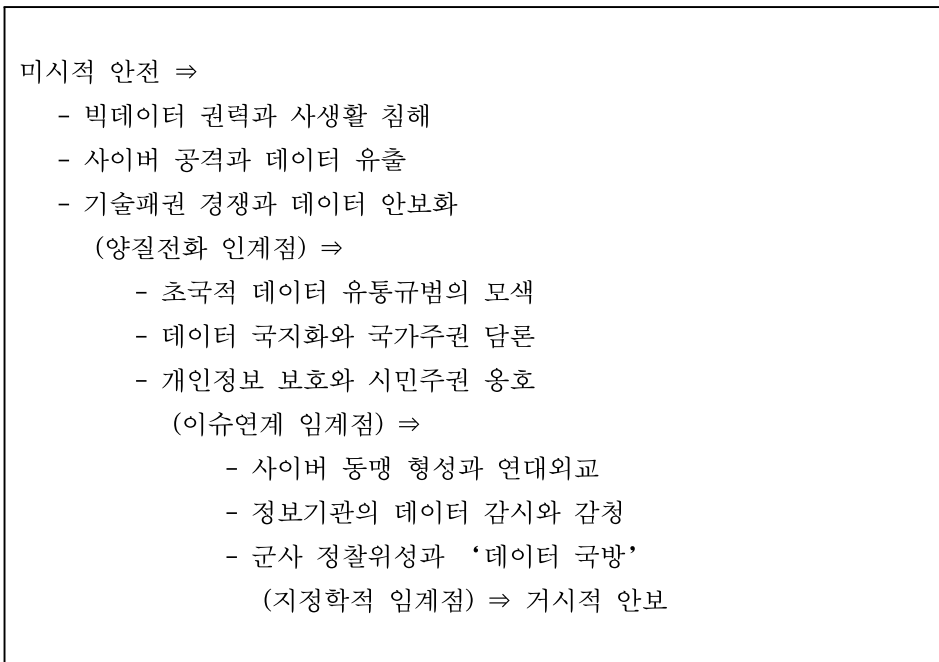
- 백신 개발이 국가경쟁력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전쟁의 장이 되면서, 타국 백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백신 개발 정보를 빼내려는 사이버 첩보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등 외국 정보기관에 의한 미국 백신 해킹시도가 예상된다고 발표함. 영국 전문가들은 적대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훔치기 위해 영국 대학과 연구시설을 해킹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가첩보 활동과 군사 활동도 언택트(untact) 상황에 맞춰 변화할 것임. 국가 간 사이버 첩보는 더 일상화할 것이며,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저강도 도발로서의 사이버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이버 위협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사이버 전략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이 사회적 안전을 유지하는 핵심 주체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자기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를 쓴 경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환경에서 나와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자발적인 시민역량 중심의 건강한 사이버 안보체계의 구축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

2) 데이터 안보의 등장

- 최근 사이버 안보의 주된 내용은 데이터 안보(김상배, 2020b)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고 있음
- 단순히 정보를 다루는 기술(IT) 시대가 가고, 이제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DT)의 시대가 도래함.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었다면, 데이터는 산업의 ‘원유’에 비유됨

- 빅데이터 권력의 확산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에 논란을 야기 시키기도 함
 - 사이버 공격의 증대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안보화' 논란을 낳았으며, 테러 색출을 내세운 데이터 감시를 정당화하고 있음
 - 데이터 안보는 미시적 안보의 문제가 집단 차원의 보안 문제를 거쳐 거시적 안보의 문제가 되는 신홍안보의 대표적 사례임. 즉 사생활 침해의 위협이 그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거시적 안보와 연관될 가능성이 커짐
 - 초국적 빅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고, 의도적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와 지적 재산을 절취하고 국가기밀을 담은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음
- 김상배(2018)는 신홍안보로서 데이터 안보가 갖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림 3-2] 신홍안보로서 데이터 안보의 창발(김상배, 2018)



3) 사이버 안보와 개인정보 주권

- 빅데이터 권력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됨.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수집, 처리, 분석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 마케팅이나 공공정책에 활용되기도 함
 - 문제는 수많은 사용자들의 경제활동 동향과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사적 권력으로서 민간기업에 집중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임. 특히 구글(G), 아마존(A), 페이스북(F), 애플(A), 즉 GAFAs로 불리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빅데이터 권력이 비대에 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6년 구글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보안 조치 없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을 물음. 2017년에도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밝혀져 곤욕을 치름
 - 아마존은 고객들의 물품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자회사나 제휴회사들과 공유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음. 아마존의 택배용 소형 드론이 남의 집을 엿보거나 동의 없는 무단 촬영 등의 이유로 사생활 침해 이유로 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행정명령을 받음
 - 2016년 페이스북은 데이터 분석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수천만 명의 정보를 트럼프 대선 캠프로 넘겨주어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폭로되어 곤욕을 치름. 2018년에도 세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이 적발되어 주가 하락과 가입자 이탈이 발생함
 - 2010~11년 애플은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었고, 2014년에는 위치서비스 기능을 꺼도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버그가 발생함. 애플이 iOS에 사용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백도어를 숨겨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기도 함

-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 사건은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재검토하고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란을 제기하게 함. 실제로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시스템, SNS 등 각종 플랫폼을 소유한 빅데이터 기업들은 이용자의 검색 내역, 위치정보, 상품구매내역, 콘텐츠 선호도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와 상품추천에 사용하거나 제3의 기업에 판매해 옴
- 이러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편견이 담긴 예측 분석으로 인한 개인 차별을 가할 수 있음. 또한 차별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화되면 그 차별 여부조차 파악하기 힘들게 됨

○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주권 옹호를 위한 조치가 나타나고 있음

- EU는 2018년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함. 여기에는 기존의 데이터 열람권이나 수정권 등과 함께 데이터 삭제권(잊힐 권리),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개체적 개인의 권리(민권)를 바탕으로 한 집합적 국민의 권리라는 점에서 일종의 ‘시민주권’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한국 역시 2018년 각 분야에 개인 중심의 데이터 유통체계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료, 금융, 에너지, 유통, 학술연구 등의 분야에 도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2020년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됨. 이를 통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음

전문가 심층면접

- 1절. 조사 설계
- 2절. 전문가 인터뷰 내용
- 3절. 조사 결과(정리)

4장 전문가 심층면접

1절.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 민방위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민방위 정책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인터뷰 실시(온오프라인 병행)
 - 민방위의 법률적 위상 및 조례 제정을 고려한 법률 전문가 인터뷰
 - 민방위 교육의 현황 직접 조사를 목적으로 한 민방위 교육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연구자 대상 인터뷰

- 국가안보 및 지역정치에 관련 전문가
 - 글로벌 및 국가안보의 거시적 맥락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정치 및 군사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진행
 - 코로나19에 관련한 조사 및 분석을 기 실시한 연구자 대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위기관리 역할 분석 연구자 대상

- 민방위에 관련한 여성의 인식 및 경향 조사
 - 민방위에 대한 지역정서는 물론 여성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문가로 활동하는 여성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실시
 - 민방위교육의 직접 대상인 민방위대원 포함하여 현장 평가 기술

2. 조사 내용

- 글로벌 및 국가안보의 거시적 변화에 대한 경향과 향후 전망
 - 글로벌 안보변화의 경향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전략과 정책제시
 - 국가제도 변화를 통한 대응적 차원 활동 세부 확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할 등의 설명

-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조건 및 사회적 위기 대응방안
 - 지역사회공동체의 민방위 교육 콘텐츠 다양화 및 내실화 방향
 - 여성 민방위대의 필요성 및 운영 방안
 - 지역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3. 조사 방법 및 구조화

- 조사방법으로 온-오프라인 인터뷰를 동시에 실시
 - 코로나19 상황으로 우선 온라인을 통한 서면조사를 실시
 -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인터뷰 및 오프라인 인터뷰를 별도로 마련하여 진행(민방위 관련 정책제언 중심)

- 조사내용의 기술적 범위를 5가지로 구획하여 정리함
 - 코로나19 위기극복 전략 및 정책제언
 -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제도 변화를 통한 대응
 -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조건 및 사회적 위기 대응
 - 지역의 민방위 활동 제고 방안
 - 사회적 재난관리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설계 및 실행방안

2절. 전문가 인터뷰 내용

1. FGI 개요

- FGI는 전문가와 일반인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전문가는 지역 활동가 및 연구자로 구분
 -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함

[표 4-1] FGI 조사대상자(전문가)

| 구분 | 소속 | 성별 | 연령대 | 지역 |
|----|----|----|--------|----|
| A | 지역 | 남 | 60대 초반 | 대전 |
| B | 대학 | 남 | 40대 중반 | 대전 |
| C | 대학 | 남 | 40대 초반 | 대전 |
| D | 대학 | 여 | 40대 중반 | 대전 |

[표 4-2] 일반인 인터뷰

| 구분 | 소속 | 성별 | 연령대 | 지역 |
|----|----|----|--------|----|
| X | 지역 | 남 | 40대 초반 | 대전 |
| Y | 대학 | 여 | 30대 중반 | 대전 |

- 전문가와 일반인 인터뷰 핵심사항
 - 일반인 대상의 경우 지역민방위 시설 및 운영 교육 참여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
 - 전문가 대상의 경우 연구목적에 기술된 사항을 구조화하여 인터뷰를 실시함

2. FGI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극복 전략 및 정책제언

- 기본적인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마트, 쇼핑, 레저 등 포기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많습니다. 가급적 사람이 몰리는 곳을 가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감염자 확진경로 및 동선 등을 잘 파악하고,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물품의 구입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일반 X)
-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불편합니다.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19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Y)
-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나 기업 그리고 모든 공동체 생활이 비정상이 정상인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 따라서 국가 및 사회가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지구의 환경위기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감염병에 대한 정부나 지방정부의 방역정책이나 관련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국가의 방역정책과 관련정보들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행동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예상되는 변화는 과거의 단절과 대전환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가 예상되며... (전문가 A)
- 중국발 코로나19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은 더 이상 국가안보 개념이 군사위협과 같은 전통적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염병 방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시 시스템과 관리 방식은 국가와 사회,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은 글로벌화 시대에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투명한 정보 전달과 이를 통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가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비용이 들고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임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이후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과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현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위기를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하는 국가와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정부의 개방성과 투명성, 자율적 참여를 통한 공유와 상생 그리고 협력의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전문가 B)

-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비대면 및 개인 생활이 강화되고 대면생활을 기피하면서 사회 공동체 생활이 해체되는 위기의 상황이다. 토머스 프레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명제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공동체의 힘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고 본다. (전문가 C)
-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이전 시기에 발생했던 조류독감, 에볼라, 메르스, 사스 등의 감염병과는 규모나 영향면에서 더 큰 강도로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포함해 미래는 코로나 이전(BC)과 코로나 이후(AD)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력과 변이형, 그리고 고연령대에 주로 보이는 높은 치사율은 생명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다른 형태의 감염병 팬데믹의 불안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 혹은 공동체의 위기인 동시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 위기에 연관되는 점에서 ‘지역적(local)이며 지구적(global)인 위험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위기에 대한 극복 전략은 지역과 세계

의 두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실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고 정보 및 문제점을 공유하며 연계하고 연대하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 D)

○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제도 변화를 통한 대응

- 21세기 글로벌 시대와 세계화 추세에 따라 안보의 개념변화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확장 및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가치는 국가존립에서 번영과 국민의 행복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보대상은 국가위주에서 개인위주로 전환되고, 안보분야도 군사안보 위주에서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환경 등으로, 안보영역은 테러·마약밀매·AIDS·감염병 등 초국가적 위협으로 확대되고, 안보방식은 양자 및 집단안보에서 다자·공동·협력안보로 전환되는 등 포괄적이고 총합적 안보관으로 확장되고 있다... 민방위 대원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과 마음자세는 민방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무와 역할 수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법과 규정, 사회적 윤리를 준수하고, 개인안보를 존중하며, 질서유지와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재난과 생활안전의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해 보면 우선 민방위대 편성면에서 교통·시설·의료·문화 등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인구의 편중 및 쏠림현상과 인구단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관서의 축소 및 증대 등 자원관리와 편성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생활안전 위해요소 등 생활 밀착형 위기가 증대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연합 및 직장연합의 연합 민방위대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지침의 구체화와 실행준비가 요구되며, 주민 생활밀착형 위기와 주민 친화적 차원에서의 지역 민방위대 체계도상에 지원여성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민방위 훈련면에서는 지역특성과 취약분야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특성화 훈련으로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민방위 훈련 내실화 방안이 미흡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

술 교육 등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의 강화와 훈련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등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발전방안으로는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맞는 책임제 훈련으로 소속기관 및 관련업체가 협업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의 안보 침해 및 재난발생 사례, 지리적 여건, 취약분야 등을 분석하여 훈련 종목 선정 및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소방·대피 시설 안전 점검 및 층별 대피 경로 확인을 강화하며, 지역별로 완강기, 소화기,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 교육을 좀 더 강화하여 실시하고,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조직과 협업하여 주민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전문가 A)

- 기존 민방위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한 유기적 연결 기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인간안보와 같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포괄적 국가안보 개념으로의 확대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방위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을 연결하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민방위기본법”에 나타나는 “민방위사태”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통합방위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재난사태 등의 개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복합적 재난 및 안보에 대비하는 시민교육 및 양성이라는 목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개념의 확대와 유기적 통합의 측면에서 소방, 경찰 등의 시민안전교육을 통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민방위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 B)
- 민방위대는 전시 및 사변 등의 사태 외에 재난이나 전염병 확산 등의 상황에서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실제 동원된 사례도 없다. 만일 전염병 확산 등에 따라 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때, 1차적으로는 행정력 자체만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와 비슷하다). 민방위대의 경제활동을 멈추고 민방위로

동원하는 것이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효과적일까? 행정력에 한계에 따라 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민방위대를 동원하는 것이 나은지, 전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직한 임시직 등을 고용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나은지를 고려하였을 때, 후자가 더 나은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실직자, 폐업자 등을 민방위로 동원하여 비용을 보전하면 어떨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방위대를 직업 유무 등으로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현 제도상 제한된다고 보고, 선별적 동원시 평등 원칙의 위반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민방위는 적극적 활용보다는 필요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도로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C)

- 우리나라의 안보는 반공주의 및 통제 중심의 국가안보를 지속해 왔습니다. 현재 분단 상황임을 고려하고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조는 지금도 어느 정도 유효성을 지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비롯해 이상기후, 온난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등은 물리적인 전쟁을 넘어서 글로벌 국가 전체를 파괴하거나 특정 지역을 붕괴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동시에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의식 및 정책과 제도 영역의 시스템을 더욱 정교해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간 민간안보를 주요하게 기능했던 우리나라의 민방위 제도 역시 상황 대응적 차원에서 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사안 중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 보면, 첫째, 민방위 제도에 대한 필요성 및 기능에 대해 시민들이 그 존재성을 잘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특히 비대면이 이루어지면서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민방위 제도의 취지와 역할 등이 더욱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방역과 인간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민방위 제도의 기능 및 역할 등의 인지와 체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시대에 걸맞은 교육 방안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의 질문과 관련시켜 ‘민방위 제도’라는 명칭을 새롭게 도입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민방위’라는 명칭이 갖는 낙후성, 군/민 중심의 이분법적 접근으로의 오인, 생활안보와 인간안보로의 변화에 따른 명칭의 전환을 통해 새로

운 명칭과 그에 따른 제도적 정책 등을 마련하고 홍보하면 좋을 듯합니다. ‘민방위 제도’의 공통 인지를 통해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기관, 민간 기업 등 이름(네이밍) 공모를 시행하면 이름 선정 및 홍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 D)

○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조건 및 사회적 위기 대응

- 비대면 교육의 경우 현재 업로드 된 영상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비대면 교육의 경우에도 1~4년차, 특히 1년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업로드 된 영상을 보는 불편함으로 인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루하기만 한 교육이 될 소지가 큼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용이 연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을 볼 때 1년차의 경우에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X)
- 비대면 교육시간 확대가 민방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제한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Y)
-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사회적 위기 대응차원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민방위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민방위 교육도 유사시 비접촉 교육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실감체험형·몰입형교육과 양방향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과 특성화된 지방정부 차원의 에듀테크 발전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민방위 교육으로 1~4년차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과목과 내용, 교육방법을 1년차와 2~3년차, 4년차로 구분하며, 필수과목에 개인안보와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선택과목은 지역의 특성과 민방위 대원의 교육연차를 고려하여 구분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방법은 강의, 동영상 시청,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방위 강사의 재량으로 구성하는데 지방정부 차

원의 표준교안과 동영상 제작/활용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하여야한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민방위 교육 중 참여형 교육과 (자율) 참여형 교육의 비중을 확대하고 재해재난이 발생시에 적극 민방위 대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가 A)

- 민방위기본법은 개정을 통하여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국가재난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2014년 11월에 발족하여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민방위 교육장소와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국가재난안전교육과 관련한 민방위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의 장, 나아가 실습이 가능한 실습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기존 군사훈련 중심의 민방위교육장이 아닌 민방위시민안전교육센터(가칭) 건립을 통해 전 방위적인 교육과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양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시설을 갖추고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참여형, 능동형, 복합형 안전교육센터를 건립을 제안한다. (전문가 B)
- 공공기관 조차 민방위훈련에 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는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민방위대에게 내실있는 훈련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본다. 쏠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구성원의 훈련 내실화를 바탕으로 그 가족들에게 훈련 내용 등이 전달되고, 민방위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수 국민 및 민방위대 구성원이 공감한 뒤, 일반 민방위대의 훈련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 C)
- 민방위 교육 역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방위 교육의 콘텐츠를 기획해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는 국가 차원의 콘텐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

츠, 세대와 직업군 등을 고려한 콘텐츠 등을 기획하고 확보해 나간다면 ‘생애주기에 따른 민방위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변화된 지점들을 보완하고 적용하면서 다양하고 안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처럼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질병관리청의 홍보 영상과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등으로 위험성과 안전을 위한 생활방역이 지속적으로 환기되듯이 민방위 교육과 관련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교육현장 및 미디어를 통해 안전안보가 필수적이며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와 내실화 조건 및 대응전략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 D)

○ 지역의 민방위 활동 제고 방안

- 여성민방위대의 경우에도 똑같은 민방위 대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민방위 업무에 있어서도 차별(차이)이 주어지면 안 되며, 평시 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민방위대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를 불문하고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주요 임무 및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수행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어서 안 되고, 모든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남성 대원만이 할 수 있는 임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에 한하여야 합니다. 임무 및 역할의 범위에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수행하지 못하는 대원을 여성이라 할지라도 민방위대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 X)
- 초·중등학교에서도 화재 대응법 등을 교육 받고 있습니다. 성인 여성이라면 위의 평시 임무 및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민방위 사태라 함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무 및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

어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에 맞는 임무 및 역할을 정하여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Y)

- 민방위대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화산활동 등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과 사회재난으로 화재·붕괴·폭발사고와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모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피해, 그리고 2019. 3. 26일 추가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섬세함과 엄마 같은 마음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재해재난 예방 및 예찰활동과 경보전파와 생활안전 분야가 있다. 따라서 지원여성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지원여성 민방위대는 기본적으로 민방위 교육과 훈련에 참가하여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활안전 문화 확산과 예방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놀이터 안전, 스쿨존 지역에서의 사고예방, 여름철 물놀이 안전, 가을철 산행 안전, 유사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승강기 안전,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 마을안길 정비와 꽃길 조성 등 주민 친화적 활동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에 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전문가 A)
- 효율적인 지역민방위 활동을 위해서는 민방위 인적자원의 감소 상황 및 민방위 개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성 민방위대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여성의 민방위대 참여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및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 혜택 방안 등의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방위대 구성원을 등급 혹은 참여에 따른 구분을 통하여 기존 민방위대원, 일반 시민(연령대별, 성별 구분) 등으로 구분하여 자

을적 참여를 높이고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전문가 B)

- 여성 민방위대의 활용은 「민방위기본법」상 여성을 법에 의하여 바로 민방위로 조직할 수 없으므로, 여성들의 지원에 따른 조직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여성의 지원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지, 정말 여성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민방위대 인원이 부족하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40세 이상의 남성이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여성 민방위대 활용은 여성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필요성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양성평등이 확대되는 시기에 ‘여성’ 민방위대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리 구성의 어려움, 정치적 논란 등으로 인한 정무직 자치단체장의 거부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다. (전문가 C)
- 안전안보, 생활방역의 차원에서 민방위 활동은 ‘돌봄’과 ‘예방’의 차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의 인적자원 활용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상황, 문제점의 부분은 무엇인지 실제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여성 민방위대’의 활용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2번 항목에서 명칭의 부분과 관련지어 ‘여성 민방위대’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듯합니다. 또한 기존의 안전안보와 생활방역의 경우 아동, 노인 등 모든 세대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세대별 준비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난이나 감염병 등은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교육 콘텐츠나 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기 상황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사례와 해외 지역성을 고려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등에 대한 조사 연구는 대전에 적합한 돌봄과 예방 모델을 만드는 데 참조할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민방위대’가 운영될 경우 공동체 연락처 및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시민의 안녕과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마을공동체나 아파트 부녀회 등을 활용한 민원 수렴 및 제안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과 폭우-홍수, 지진 등 민방위 방향성이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다는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봅니다. (전문가 D)

○ 사회적 재난관리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설계 및 실행방안

-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쟁을 비롯한 재난에 대피하고자 구축한 주민대피시설인데,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대비한 대피시설이 과거부터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규모가 매우 작고 실제 미사일 포격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현재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어려우나, 일반 시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대피시설의 기능을 겸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X)
- 지역의 민방위 시설을 시민 친화적(시민 숙지형) 시설로 운용을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전에 먼저 민방위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보면 영구 중립국인 스위스는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서 민방위제도와 시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대피시설을 보면 각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소지 근방에,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작업장이 소재한 곳에 환기 시설을 갖춘 지하 대비소와 지하 대피소 안에 안전장소를 갖추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하 대피소는 군인을 제외한 전 국민의 95% 정도를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이한 사항은 비상시에 문화재를 대피하기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하 대피소는 평시에는 보관소나 창고 또는 놀이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언제든 24시간 이내에 민방위 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환경과 여건면에서 다르지만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시민 친화적인 시설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시에는 휴식 및 놀이 공간, 소규모 공연장, 민방위 장비 친

속 체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과 장기적으로는 재해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대비시설도 준비해야 한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평소 주민들이 야외활동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홍보와 관리를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며, 유사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발전기 없이 급수를 지원할 수 있는 자연 음용이 가능한 장소를 확대 개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재난안전 포털의 활용과 안전디딤돌 앱 활용으로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위치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 A)

- 대피시설은 공공시설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 민간 건물(주로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이며 이러한 시설을 시민 친화적 시설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민방위교육장소 또한 다중집합시설로 강의를 중심으로 한 교육장소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맞도록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민간시설의 경우는 이 또한 어렵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바 있는 민방위시민안전교육센터(가칭) 건립을 통해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B)
- 다음으로 현재 민방위 시설을 시민 친화적(시민 숙지형)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민방위 시설 다수가 지하시설로 지정되고 평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바, 지역 시민단체 등에게 개방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리 및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전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공간 개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민방위시설과 연계한 공간 개방을 생각해볼 때이다. 다만, 전제되어야 할 것은 민방위시설로 즉시 활용가능하도록 관리주체에게 명확한 시설 사용지침을 알려야 할 것이다. 대피공간이므로 공연장으로는 활용가능할 것이지만, 일반 사무공간은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사무공간도 단순한 테이블, 노트북 등을 이용한다면 개방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전문가 C)

- 민방위 시설을 시민 친화적(시민 숙지형) 시설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에 공감합니다. 대전광역시의 5개구에 거주하는 시민의 분포 및 지역 시설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 설계 및 실행이 이루어진다면 대전에 적합한 재난관리 대응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지역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밀집과 도시 인프라, 직업군 등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전파의 위험성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따라 방역의 실효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동구와 대덕구 등은 구도심의 성격으로 고령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자리잡은 지역에는 시민 숙지형 시설이 사회적 재난관리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과도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 및 시설 공유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면 좋을 듯합니다. (전문가 D)

3절. 조사 결과(정리)

○ 사회적 재난관리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설계 및 실행방안

- 현재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다중이용시설의 활용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과거와의 단절과 사회공동체의 위기, 즉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질서의 형성을 예측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까지의 전통적 안보개념이 비전통적인 포괄적 인간안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주지하고 사회시스템과 관리방식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음
- 코로나19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어오던 자유무역질서의 후퇴를 가져오는 등 신 보호무역주의 및 국가 간 경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한편으로 전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감염증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계와 연대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러한 물결은 국가단위가 아닌 사회공동체적 측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현 상황을 글로벌화시대에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며, 국내적으로 정부와 시민 사이의 투명한 정보 전달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가 핵심적이라는 것, 사회 공동체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각인되고 있음
-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지역과 세계 두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현재 위기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고 정보 및 문제점을 공유하는 동시에 연계 및 연대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임

○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제도 변화를 통한 대응

-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안보개념은 전통적 개념에서 인간안보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시적인 단위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존 민방위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한 유기적 연결 기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함. 즉 인간안보와 같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포괄적 국가안보 개념으로의 확대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방위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임, 즉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동시에 지속해야한다는 점에서 시민의식 및 정책과 제도영역에서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을 연결하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난사태 등의 개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복합적 재난 및 안보에 대비하는 시민교육 및 양성이라는 목표가 추가될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음. 민방위 개념의 확대와 유기적 통합의 측면에서 소방, 경찰 등의 시민안전교육을 통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민방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활동 확대를 위한 민방위 개념 자체의 재정립과 명칭의 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민방위 개념 또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영역으로 재 기획되어야 함. 즉 지역연합 및 직장연합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운용방안, 주민 생활밀착형 위기 및 주민 친화적 차원에서의 민방위 제도 개선이 시급.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맞는 책임제 훈련, 지역의 안보 침해 및 재난발생에 관한 대처 등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
- 다만, 부가적으로 기존 민방위를 사회재난관리적 측면에서의 활용할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비교형량을 통해 제도 및 경제, 인권적 측면의 효용성에서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조건 및 사회적 위기 대응

- 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 중 참여형 교육과 자율적 교육참여를 확대하고 재해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민방위 대원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주장임
- 일부 전문가는 기존 국가재난안전교육과 관련한 콘텐츠의 주체가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기존 군사훈련 중심의 민방위교육장이 아닌 (가칭)민방위시민안전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전방위적인 교육과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이러한 센터에서는 다양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시설을 갖추고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참여형, 능동형, 복합형 교육을 기획하는 등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으로 기존의 공공기관 조차 민방위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는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민방위대에게 내실있는 훈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존재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쉰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구성원의 훈련 내실화를 바탕으로 그 가족들에게 훈련 내용 등이 전달되고, 민방위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수 국민 및 민방위대 구성원이 공감한 뒤, 일반 민방위대의 훈련 강화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기도 함
- 결론적으로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방향으로 민간부분에서 확장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 민방위 교육에 쉽게 접근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민방위 교육콘텐츠는 국가, 지역, 세대와 직업군 등 다양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여 콘텐츠의 안정적 체계 확립 주장

○ 지역의 민방위 활동 제고 방안

- 일반 및 전문가들은 여성민방위대 활용 조건 및 가능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임. 더 나아가 남과 여의 생물학적 차이를 반영한 임무와 역할 부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 비상시 및 사회재난 위기시 개개인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역할부여를 요구함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역민방위의 효율적 활동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개념의 사회적 역할 이해를 확대할 필요성과 참여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일부 의견으로 양성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여성민방위대의 구성 어려움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음
- 다만 여성의 민방위대 참여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및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 혜택 방안 등의 모색, 민방위대 구성원을 등급 혹은 참여 정도로 나누고, 기존 민방위대원, 일반 시민(연령대별, 성별 구분) 등으로 구분하여 자율적 참여를 높이고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결론적으로 안전 및 안보, 생활방역의 차원에서 민방위 활동은 '돌봄'과 '예방'의 차원으로 강화되어야 함에는 다수가 인정하며, 여성을 넘어 세대별 민방위 역할도 규정해야 한다고 함. 일반적인 사례로 '여성민방위대'가 운영될 경우 공동체 연락처 및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시민의 안녕과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마을공동체나 아파트 부녀회 등을 활용한 민원 수렴 및 제안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함. 이와 같은 여성의 민방위 구성과 역할은 무엇보다도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과 폭우·홍수, 지진 등 민방위 방향성이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다는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사회적 재난관리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설계 및 실행방안

- 민방위 시설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축조된 시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규모의 협소 및 실제 위기상황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음. 현재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어려우나, 일반 시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대피시설의 기능을 겸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을 주장
- 지역의 민방위 시설을 시민 친화적(시민 숙지형) 시설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시설의 안정성, 수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요구되며, 국가위기 및 사회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24시간 이내 민방위 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유지되어야 함이 강조됨. 또한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재난안전포털의 활용과 안전디딤돌 앱 활용으로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위치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를 주문함
- 결론적으로 민방위 시설을 시민 친화적(시민 숙지형) 시설로 변경 운영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의 5개구에 거주하는 시민의 분포 및 지역 시설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 설계 및 실행이 이루어진다면 대전에 적합한 재난관리 대응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함.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등 지역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별 인구 및 시설의 차이를 감안한 재난안전 시설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대전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과도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 및 시설 공유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민방위 제도 발전방안

- 1절. 민방위 교육 발전방안
- 2절. 민방위 경보 방송
- 3절. 민방위 대피시설
- 4절. 민방위 급수시설

5장 민방위 제도 발전방안

1절. 민방위 교육 발전방안

1. 민방위 교육 현황

- 대전광역시 2020년 민방위 강사 위촉(2. 27.)
 - 자치구별로 선발해 오던 민방위 강사를 2019년 이후, 시 선발로 통합하고 각 구청 교육 일정에 맞춰 강사 배정
 - 민방위소양 15명, 응급처치 7명, 화재안전 3명, 화생방 3명, 재난안전 5명 등 총 33명

-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의 <재난안전 관리> 교육 콘텐츠(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2020)
 - 교육목표 : 주요 생활, 자연, 특수재난 등에 대비한 예방과 대처능력 배양,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 교과목 구성 : 안전신문고 활용, 기후변화의 이해와 저탄소 생활실천, 사례로 배우는 재난대응(자연, 사회재난), 원자력 안전규제와 비상대응, 재난관리자의 임무와 역할,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설, 재난현장 언론대응과 소통, 사례로 보는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전119시민체험센터 현장학습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 : 재난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2. 사이버 민방위 제도 확대

- 민방위 제도에서는 아직 사이버 공간 관련 공식적인 민방위 활동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사이버 민방위 역시 국가안보와 재난에 대비한 일체의 비군사적 자위 활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대의 임무와 기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사이버 민방위 임무를 규정할 수 있음

[표 5-1] 사이버 민방위대의 임무(안)

| 구분 | 임무 |
|------------|---|
| 평상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위협 감지, 사이버 소요 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 및 운영 · 사이버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계의 확립 · 사이버 민방위를 위해 필요한 자원·장비의 관리, 유지 및 보수 · 사이버위협의 대상이 되는 자체 시설의 보호 · 민방위 교육훈련(네트워크 차단, 개인 PC 셧다운 등의 사이버 훈련 포함) |
| 민방위 사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보 및 조치 ·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하는 서비스, 주민에 대한 통제 · 사이버 공격이 예상되는 위험물, 시설의 예찰 · 사이버 공격으로 파손된 주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사이버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 출처: 김경진(2015)

- 현재까지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법령은 없음. ‘사이버작전사령부령’(시행2019.2.26.)의 의해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있음(제1조)
- 미국의 경우 미시간주에서 2014년 미시간 사이버 민간단체(MiC3: Michigan Cyber Civilian corps)를 설립함

-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훈련 지도, 지속적인 시민 교육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역할 수행
 - 소수의 상근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데, 이들에게 지속적인 자원봉사 교육, 윤리적 해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운영자금은 주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사이버 분야 관련 학계, 협력업체, 개인의 기부금 등을 통해 조달됨
- 에스토니아의 경우 EDL(Estonia Defence League)이라는 예비군과 민방위의 중간적인 형태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자원자에 의한 민간영역을 담당하는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고 있음
- 사이버 부대는 민간영역에서 요청하는 정보 보안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지원, 공립학교 시스템에 대한 악성코드 검사 솔루션 공급,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쓰이는 전자 시스템의 보안 테스트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운영자금은 정부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계, 협력업체, 개인 기부금 등에 의해 조달됨
- 이와 같은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과 해외 사이버 부대 운영 사례를 고려할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민방위대 운영에 대한 인력, 교육, 훈련, 운영자금 모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방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김경진, 2015)

3.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방안

-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할 위기 유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역량 구비가 필요함(안철현, 2009)
- 민방위와 위기관리 거버넌스 단위 간 평시 위기관리 연계성 강화가 요구됨
 - 민방위대, 시민사회단체, 각종 전문가 집단의 유기적 위기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재난 등 위기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의 강화가 필요함
 - 지방정부가 갖는 재정 및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대응 능력의 구비가 절실히 요구됨
-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중요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반 조직 운영에의 반영이 필요함
 - 위기관리 업무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미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는 조직을 설계하고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재정, 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이들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의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함

2절. 민방위 경보 방송

1. 민방위 경보 방송에 대한 정보 수용자 인식

- 민방위 경보 전달 방식은 옥외 경보 사이렌, 라디오를 통한 동시 음성 방송, TV와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통한 자막 형태의 경보 등이 활용되고 있음
- 민방위 경보 방송에 대한 정보 수용자 인식에 대한 조사(곽천섭 외, 2015)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보 수용자들은 민방위 경보 방송을 개인 미디어보다는 대중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음
 - 민방위 경보 방송의 청취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년에 5회 이하로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보 수용자 4명 중 1명은 경보 방송의 사이렌과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응답함
 - 민방위 경보 방송의 사이렌은 소방차 등과 같은 다른 경보 사이렌에 비해 낮은 기억 회상과 구분 능력을 보임
 - 실제 상황 시 사전 지식에 따른 행동보다는 방송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음

2. 재난정보 입수 매체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전광역시는 시민홍보 및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대전광역시, 2020b)
 - 언론매체, 홈페이지, SNS 활용, 휴대폰재난문자방송(CBS) 송출, 홍보 포스터 제작 배부를 통한 시민행동요령 예방수칙 안내
 - 일일상황 보고, '120 콜센터' 상당안내 서비스 실시

- 배은주(2020)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재난정보 입수 매체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19 정보 입수 매체는 TV뉴스(59.1%), 휴대폰 재난정보 안내문자(57.3%), 인터넷 포털(54.4%), 소셜미디어(12.3%), 전화 및 메신저(7.4%) 순으로 나타남(다중 응답)

- 연령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대의 경우, 재난정보 안내 문자(67.2%), 인터넷 포털(59.6%), 소셜미디어(24.4%) 순으로 나타남
 - 30대의 경우, 주로 인터넷 포털(70.2%)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의 경우, 인터넷 포털(62.6%)과 TV뉴스(61.9%)가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50대와 60대 이상은 TV뉴스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획득하고 있음

- 한편 인천시민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발송하는 ‘재난정보 안내문자에 대해 유용하다는 응답이 76.6%로 나타나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매우 유용 20.7%, 대체로 유용 55.9%, 보통 18.0%

- 시사점: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민방위 사태 시(민방위 훈련 포함) 재난정보 안내문자와 같이 신속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3. 민방위 경보시스템 개선 방향

1) 현황

- 민방위 경보 시스템은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됨

- 민방공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종류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 해제

-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종류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 해제

2) 평가 및 개선방향

- 현재 대전광역시의 민방위 경보 시스템 운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⁶⁾

- 민방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비상사태 시 대응해야 할 개인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는 국민의식 개선과 더불어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에 1차적인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6) 대전광역시는 2019년 민방위 경보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함

- 2차적으로, 정보 수용자들이 문자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민방위(재난 포함) 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민방위 및 재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방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 접근 용이성이 구비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한편, 대전에서 개최한 AI 기반의 화재 대피로 안내 시스템을 민방위 운용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12월 9일, 한국기계연구원은 인공지능 기반 화재 대피로 안내 연구성과 시연회를 도시철도 시청역에서 개최함
 - 이 시스템은 역 안에 설치된 시뮬레이션(IoT) 센서를 통해 연기농도·온도·일산화탄소 등을 바탕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대피로를 계산하여 화재발생지점부터 출구 아래 계단까지 기다란 녹색 선을 깜박거리게 하는 방식임(주재현, 2019)
 - 아직은 시범운영 단계에 있는 시스템이지만 실증테스트와 검증을 거쳐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시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3절. 민방위 대피시설

1. 현황

-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설치 또는 공공용으로 지정된 지하 대피시설을 의미함

- 민방위 대피시설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시도·시군구별로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지도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치 확인도 가능함

2. 평가

- 한국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이스라엘 또는 북한과 같이 비상 상황 발생 시 근접한 곳에 방호체계를 제대로 갖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임
- 한국국가전략연구원(2016; 제임스 김 외, 2018 재인용)의 국민안전처 정책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피 시설 설치기준과 수요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의 적절함과 효용성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 한국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공공용시설’과 ‘정부지원시설’로 구분됨. 공공용시설은 10시간까지 체류가 가능한 시설로 1인당 소요면적 기준은 0.825m^2 이며, 정부지원시설은 2~3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시설로 1인당 소요면적 기준은 1.43m^2 임.
 - 공공용시설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제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수용 불가능 지역으로 조사되어, 전국적으로 약 180만 명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용 불가능 지역으로 조사되어, 전국적으로 한 것으로 약 650만 명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대전의 경우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나, 한국의 적용 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1인당 소요면적이 좁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표 5-2] 국가별 대피시설 1인당 소요면적 기준

(단위: m²)

| 미국 | | 스위스 | 스웨덴 | 핀란드 | | 독일 |
|------|-----|------|------|-----|------|------|
| 단기 | 장기 | 3.30 | 0.95 | 단기 | 장기 | 1.98 |
| 0.89 | 2.8 | | | 0.6 | 2.41 | |

※ 출처: 제임스 김 외(2018)

- 민방위 대피시설의 효용성 부분과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고려와 민방위 사태의 유형에 맞는 대피시설 지정이 요구됨
 - 대피소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밀폐가 가능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완전한 밀폐가 불가능함. 이는 핵 공격에 대해 민간인을 보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피소 방호문, 방독면 등 제반 시설과 비품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됨

4절. 민방위 급수시설

1. 현황

-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 음료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함
- 민방위 급수시설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시도·시군구별로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지도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치 확인도 가능함

2. 평가

- 급수시설 시설이 음료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질관리가 요구됨
 - 유성구 공동성당 앞 급수시설의 경우 수질 오염으로 급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되어 있으나, 여전히 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시청에 학생 식수용 병물 25만 병을 대전시에 전달함(최정우, 2020)
 - 학교 내 급수대 등 공용물품 사용이 지양되고 있음
 -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재난재해 상황 시 긴급지원용으로 병물을 생산하므로 대전시는 유사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결 론

1절. 연구결과

2절. 정책 제언

6장 결론

1절. 연구결과

1. 민방위 및 운용 개념의 변화

- 21세기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민방위 역할 모색
 -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에서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포괄적 안보개념에 적합한 개념 설정을 통해 신 민방위 필요성 검토
 - 민방위의 기존 역할인 전시상황에서의 동원을 비롯하여 소규모 테러 및 사회재난안전관리의 운용까지 고려한 법률적 제도 개선
 - 기존 민방위 실태조사 및 공무원 및 민방위 대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 시설 및 장비 활용계획 운영으로 시민친화적(숙지형) 정책방향 설계

- 민방위 운용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재정립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적 역할에 비추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기준에 준하여 관내 상황을 평가하고 지역 설정에 맞는 맞춤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정책적 컨트롤 타워를 갖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주요 재난 및 위기 관리 사항을 수집하고 해당 위기관리 관련 정보를 중앙정부 및 언론 등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코로나19 상황대응에서 보인 민방위 활용의 이원화를 검토하여 재난 안전 및 민방위 부서를 동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 강화
 - 사회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연대 및 정책운영 시 공동의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연구가 보다 진전될 필요성이 있음

2.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시민친화적 환경 조성

- 국내외적 안보환경 및 사회재난안전을 고려한 민방위 교육콘텐츠의 모색
 - 국가안보 및 사회공동체 위기에 대응 강화 목적의 교육체계
 -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시간 및 교수 방법, 강사의 보완
 - 민방위 대원의 연차별 교육방법 및 교육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
(예: 1년차 필수 참여형 교육, 민방위 역할과 책무 교수, 2~4년차 혼합편성 및 집합교육 병행하는 등 지역특성 고려 자율 진행)
 -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및 영상자료 준비로 별도의 주민 친화적 지방정부 교육시스템 구축
 - 체험위주의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하는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생활안전교육도 포괄되어야 함

- 민방위 담당자의 활동 및 교육의 전문성 강화
 -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강사들에 대한 전문적 기술교육과 지역적 운용에 대한 사항 학습 강화
 - 사회안전관리 대응범위에 따른 민방위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비 및 물자확보와 운용, 민방위 경보체계 및 대국민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지역 중심의 민방위 활동 제고를 위한 여건 성숙 관심 제고
 - 민방위 관련 친숙성을 위한 센터 및 명칭 변경 속의 고려
 - 현장 중심의 기동성 및 대응성이 높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환경 조성
 - 대전광역시의 현재 추진방향인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서 시민주도형 안전문화 확산 지속 추진

2절. 정책 제언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이러한 요인을 반영한 민방위 발전방안 모색이 요구됨
 - 감염자 초기 발생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진단 검사와 새로운 검사 방식의 도입
 - 체계적인 자가 격리 제도
 - CCTV, 스마트폰 위치 정보, 신용카드 내역을 동원한 역학조사와 확진자 동선 공개
 -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시민들의 협조(안태현, 2020)

- 코로나19 이후 대대적인 사회 변화가 예상되므로 지방정부 역시 크게 네 가지 측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행정) 질병관리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감염병 관리 및 확산 억제 정책
 - (일상생활 변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상되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대응
 - (지역경제) 국내외 이동제한, 고용 및 수출, 자영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경제적 충격 대응
 - (도시공간 제고) 원격근무 및 교육,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대비한 도시공간 구조와 형태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

2. 민방위의 지역활동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위기관리 역할의 명확성
 - 중앙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역할 그리고 구조적 연계를 전제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도시 기반조성 및 대책수립에 지역의 특수성 반영
 - 민방위 활용, 시민안전교육 및 시민주도형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의 역할을 모색하여 지역활동 강화

- 평시 민방위 조직의 운영 확대
 - 평시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민방위 역할에 재난안전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권장하여 민방위 역할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
 - 여성의 민방위대 참여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신규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

3. 시민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역할 모색

-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을 시민들이 친숙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유지 관리 및 실용성 측면에서의 검토)
 - 상황과 여건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은 평시 민방위 장비 체험 공간과 각종 소규모 공연장 활용, 관련 체험 및 교육 내용 영상관람 시스템 구축 활용

-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기회 부여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하여 민방위 교육 홍보 및 콘텐츠를 제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

DSI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곽천섭 외(2015), “민방위 경보 방송에 대한 정보 수용자 인식 연구.” <방송공학회 논문지> 제20권 제6호
- 국민안전처(2015), 「포괄안보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 국가위기관리체계 연구」
- 김경진(2015), “사이버 민방위 제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함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전광역시(2020a), 확대간부회의 자료(1월 6일)
- 대전광역시(2020b), 확대간부회의 자료(2월 4일)
-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배은주 외(2020),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인식 및 요구.” 인천연구원 Issue Brief No. 06
- 안철현(2009),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민방위/비상가태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5(1)
- 안태현(2020), “코로나 사태 속 시민과 정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No. 112.
- 양기근(2008),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방안: 경상남도 여성 민방위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연구> 제2권 제2호
- 유현숙(2005), “여성자본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의 인적자본·사회자본·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4(2)
- 이 근(2020), “코로나 사태와 신흥 강대국의 조건, 그리고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 IIRI Online Series No. 65
- 이상문(2020), “대전 민방위 강사 33명 위촉.” <중도일보> (2월 28일)
- 이왕기 외(2020), “포스트 코로나 Next Normal 시대, 인천의 목표와 과제.” 인천연구원 Issue Brief No. 4
- 임채무(2020), “국방개혁 2.0 강력추진 ‘포괄안보’ 구현.” <국방일보> (6월 16일)
- 제임스 김 외(2018), “한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18-2
- 주재현(2020), “AI가 어둠 속 생명선 비춘다.” <대전일보> (12월 10일)
- 차대서(2020), “인류세의 정치와 코로나19 비상사태.”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No. 111.
- 최정우(2020), “믿을 수 없는 학교 급수대... 해결할 水 있다.” <충청투데이> (6월 18일)

행정안전부(2019), <민방위 업무 지침: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형혁규(2020),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727호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민방위기본법」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통합방위법」



부 록

〈부록〉 FGI 질문지(일반)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 방안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발전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전광역시 민방위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재난 안전 연계 민방위 교육콘텐츠 적용방안 모색
- 효율적인 여성 민방위대 운영방안 검토
- 시민 친화적(시민 숙지형) 대전광역시 민방위 시설 운용 방안 강구

아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병선 드림.
(010-3427-3339, yubsun3339@hanmail.net)

1. 귀하는 거주지 주변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1-2.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는 민방위 대피 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3. 우리나라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규모가 협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2. 귀하는 거주지 주변의 민방위 급수시설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3.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귀하가 겪는 가장 불편한 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해주세요.
4. 코로나19 위기로 민방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사이버)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우리나라는 20~65세 자원자에 한해 여성민방위대를 운용할 수 있고 그 역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 구분 | 주요 임무 및 역할 |
|------------|--|
| 평시 | ①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②민방위 교육·훈련 유도요원 참여, ③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 강사, ④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⑤생활안전예방활동 및 홍보,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
| 민방위 사태시 | ①군사작전 필요물자운반 노력 지원, ②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③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④비상급수 관리 지원, 사후관리 복구 지원, ⑤재난해제복구지원 및 재난 피해자 지원 |

- 5-1. 평시 임무 및 역할 중 여성민방위대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항목
- 5-2. 민방위 사태시 임무 및 역할 중 수행하기 어려운 항목
- 5-3. 평시 여성민방위대원의 임무 및 역할로 포함이 필요한 것은?
- 5-4. 민방위사태시 여성민방위대원의 임무 및 역할로 포함이 필요한 것은?
6. 기타 민방위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주세요.

〈부록〉 FGI 질문지(전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 방안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전광역시 민방위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재난 안전 연계 민방위 교육콘텐츠 적용방안 모색
- 효율적인 여성 민방위대 운영방안 검토
- 시민 친화적(시민 숙지형) 대전광역시 민방위 시설 운용 방안 강구

이에 아래의 질문에 선생님의 전문적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병선 드림.
(010-3427-3339, yubsun3339@hanmail.net)

1. (위기극복 전략 및 정책제시) 코로나19 등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국가안보 및 사회적 삶 등 공동체의 생활이 전방위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한, 국가 및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글로벌 상황에서의 국가제도 변화를 통한 상황 대응적 차원) 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확장 및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민방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3.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조건 및 사회적 위기 대응차원) 지역의 민방위 교육은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폭넓은 교육의 유형 및 프로세스 등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공동체 및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민방위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관한 설명 및 해당 사안에 대한 제언을 해주신다면?

4. (지역범위에서의 민방위 활동 제고 차원) 지역의 민방위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준비가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인적자원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지역민방위 활동을 위하여 여성 민방위대의 활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5. (사회적 재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정책 설계 및 실행차원) 대전광역시 등 지역에는 민방위 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나, 시설활용 및 이용측면에서는 제한되어 있고,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시설의 개보수에 관련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지역의 민방위 시설을 시민 친화적(시민 숙지형) 시설로 운용하고자 하는 바, 이와 관련한 귀하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